



국제경제리뷰

조사국 국제경제부
국제종합팀 정준우 조사역(5285)

글로벌 시리즈(5-1) 최근 주요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특징(각론) - 미국, 일본, 독일, 중국을 중심으로 -

※ 글로벌 시리즈(5) “최근 주요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특징(총괄)”(10.27일)의 후속편

- ◆ 주요국들은 성장잠재력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 및 경기회복의 공통정책 방향을 추진중인 가운데, 국가별 여건에 따른(country-specific) 정책과제에도 대응
 - 미국은 새 행정부 경제정책의 구체화, 일본은 디플레이션 극복, 독일은 EU결속력 유지, 중국은 공급측 개혁 등 국가별 핵심 현안에 대응

	국가별 정책(country-specific)	주요 변수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장적 재정정책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반이민정책 등 추진 예상 * SOC 등에 1조 달러 투자, TPP 철회, NAFTA 재협상 및 불법이민자 추방 등 ·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 행정부는 공약과 현실 사이의 3대 정책 딜레마*의 해소 필요 * 보호무역 강화 vs 일자리 창출 전통산업 중시 vs 미래 성장동력 확충 확장적 재정정책 vs 재정건전성 · 통화정책 정상화과정에서 경기 회복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관리 등이 관건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통화·재정 정책 및 구조개혁 추진(아베노믹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개혁 성공 여부 · 재정건전성에 대한 신뢰 회복 여부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혁신 등 미래산업 선도와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노동개혁 추진 * Industry 4.0, 여성 보육부담 완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렉시트, 이민정책 등을 둘러싼 EU결속력 약화 이슈의 향방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급측 개혁 등 경제구조 개편 추진중 * 제조업 2025, 인터넷+ 대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기업 구조조정 및 부채 등 주요 리스크의 관리 및 대응

- ◆ 우리나라도 주요국들과 유사하게 성장잠재력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 및 경기회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여건에 따른 정책 현안에도 대응
 -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및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한 정책 추진
 -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및 구조개혁의 성공여부는 향후 우리 경제의 주요 변수이자 관건
- ➔ 각 국가들이 직면한 정책과제와 주요 변수들에 대한 대응여하에 따라 향후 글로벌 및 각국 경제의 향방이 좌우될 전망

I. 미국

- ◆ Trump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대통령의 성향, 선거공약 및 핵심지지층 기반 등을 고려할 때 Obama 행정부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전망
 - 다만,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공약들의 수정 가능성이 있으며, 통화정책 정상화도 Trump 당선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1] 새 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1) 재정 정책

- 경기부양을 위해 인프라 등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와 소득세·법인세 감세 등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전망
 - 낙후된 도심과 고속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해 1조달러 규모 투자
 - 소득세 과표구간을 축소(7단계 → 3단계<12%, 25%, 33%>)하고 소득세율(39.6%→33%) 및 법인세율(최고 35%→15%) 인하 등 세제개편안 제시
- 다만 재정적자 증가 우려 및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공화당의 보수적 입장 등 감안시 실제 정책 추진과정에서는 논란 발생 가능
 - 완전고용에 가까운 현 상황에서 재정지출 확대는 총수요를 증가시켜 인플레이션 유발(이른바 'Trumplation') 우려
 - * '16.10월 실업률은 4.9%로 자연실업률 수준(4.7%, 미 의회예산국 추정치)에 근접
 - 한편 오바마케어는 당초 폐지 입장이었으나, 일부 조항을 유지할 것이라고 Trump가 발언(11.11일)하는 등 공약 후퇴 조짐

공약 사항	대선 이후 주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 내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후된 도심과 고속도로, 교량, 터널, 공항, 학교, 병원 등 재건 (11.11일, 트럼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바마케어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상품 경쟁으로 의료보험 단가 개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바마케어 일부조항* 유지(11.11일, 트럼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가입 전 환자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적용을 거부할 수 없음 ② 26세 이하 자녀는 부모 가입 보험에 추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인세 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표 구간 3단계로 단순화, 상속세 폐지 · 최고세율 인하 : 소득세(39.6% → 33%), 법인세(35% → 15%) 	-

[2] 통상 정책

- 자유무역협정 재검토 및 관세·비관세 장벽 강화 등 **보호무역기조 강화** 전망
 - Trump가 대통령 취임 이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폐기할** 전망인 가운데 **미 의회는 연내 TPP 비준 포기를 발표(11.11일)**
- **일부 공약(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45% 부과)은 후퇴할** 조짐

공약 사항	대선 이후 주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PP 철회, NAFTA 등 기존의 FTA 재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45%, 멕시코 35% 관세 부과 · 중국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 인정, 수출보조금 중단, 근로조건 개선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의회는 TPP 승인 포기(11.11일) ■ 모든 중국산 제품에 45% 관세부과는 와전된 것이며, 협상수단으로 제시 가능 (Ross 고문, 11.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 조작 강경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환율조작국 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미국에 보복방침 경고(11.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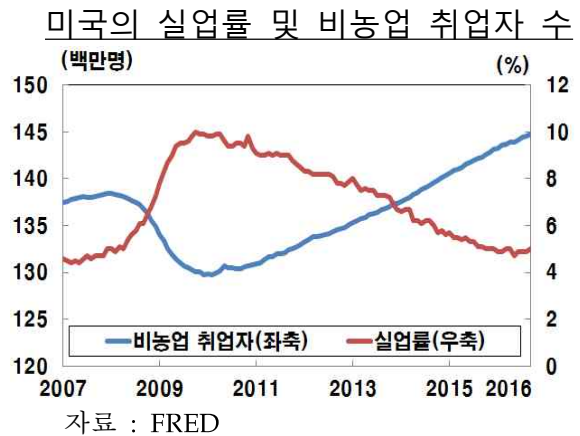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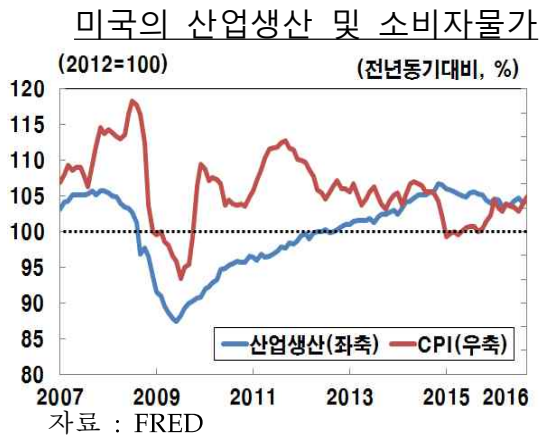
[3] 이민·산업 정책

- 자국 산업 및 노동자 보호를 위해 **이민자 배제정책**을 추진하고, 규제 철폐·정부투자 확대 등을 통해 **화석연료 등 전통적 산업의 부활** 추진 전망
 - 한편 Trump는 범죄자 우선추방 등 **이민공약의 단계적 실천방안**을 공개(11.13일)하는 등 강력한 이민통제 정책에서 **다소 후퇴**하는 모습
 - * 약 200만명의 외국인 범죄자 등부터 우선 추방할 예정이며, 최대 1,100만명에 이르는 불법이민자를 모두 추방할 것은 아님
- 다만, 해외 전문인력에 기술을 의존하는 **IT업계 반발*** 및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우려 등으로 실제 정책 추진과정에서 논란 발생 가능
 - *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하는 IT업계에서는 캘리포니아주 독립(California+exit) 주장(L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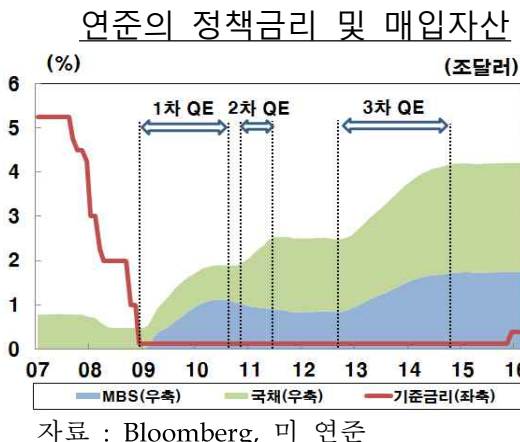
공약 사항	대선 이후 주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력한 이민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 설치, 외국인 범죄자 대상 무관용 적용 · 불법이민자 일자리 및 복지혜택 차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공약 단계적 실천방안(11.1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만명 추정 범죄자부터 우선 추방 ■ 멕시코 국경에 장벽 건설은 당장은 곤란(Giuliani 전 뉴욕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미국 화석연료 산업 재기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에 대해 회의적, 환경규제 폐지 및 에너지 수출 확대 	

2 통화정책 정상화

- Trump 당선으로 불확실성은 다소 증가하였지만 금리인상을 위한 여건은 양호한 상황
 - 미국 경제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연준이 장기간 지속한 완화적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재개할 여건이 조성
 - 미국의 산업생산이 위기이전('07년) 수준을 회복한 가운데 국제유가 급락으로 '15년 0% 내외에서 머물던 물가상승률도 상승세
 - 실업률 및 비농업 취업자 수 등 노동지표도 지속적으로 개선



- 3/4분기 GDP성장률이 상당폭 확대('16.2/4분기 1.4% → 3/4분기 2.9%, 전기 대비 연율)되면서 금리인상 논의를 긍정적으로 뒷받침
- 이에 따라 연준은 '08년말부터 지속한 제로금리에서 벗어나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추진



'16년 Yellen의장의 주요 금리인상 발언

장소(일시)	내용
하버드대 학토론회(5.27일)	수개월내 금리인상 가능
잭슨홀회의(8.26일)	최근 기준금리 인상을 위한 여건이 강화
하원 금융위원회(9.28일)	새로운 위험요인이 없다면 올해 일부 완화정책에서 벗어나는 것이 적절
보스톤 연준 경제정책토론회(10.14일)	완화적 통화정책이 너무 오래 유지되면 이익보다 손해가 커질 우려

□ 그간의 FOMC 의사록 및 연준 주요인사의 발언들도 인상 가능성을 뒷받침

- 11월 FOMC에서 금리인상 여건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고 발표되었으며, 9월 FOMC 정책금리 전망에 따르면 연준은 완만한** 금리인상 진행 예상

* 금리인상을 위한 여건이 계속 강화(“has continued to strengthen”)되고 있으나, 금리인상전 약간의(“some”) 지표를 추가 확인 필요

** 금년중 1회, '17년중 2회, '18년 및 '19년중 각각 3회

- Trump 당선 이후에도 연준 주요인사들은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해 언급*하는 등 금리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

* Fischer부의장: 물가와 고용이 모두 정책목표에 가까워졌으며, 통화완화기조를 점진적으로 철회할 근거가 강화(11.11일), Bullard 세인트루이스연준 총재: Trump 당선 이후 경제전망이 변하지 않았으며, 12월이 금리인상의 적기(11.10일)

□ 한편 시장참가자들의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

- Trump 당선 이후 불확실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방기금 선물금리에 내재된 12월 금리인상 확률이 90.6%까지 상승(11.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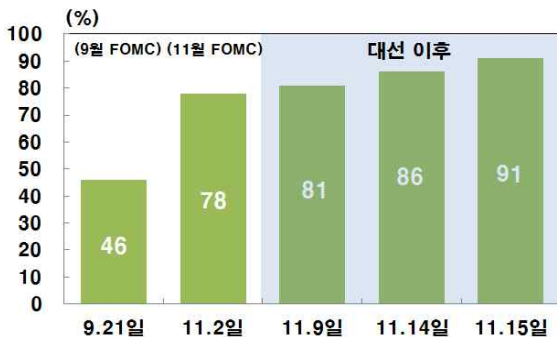
- 재정지출 확대, 노동공급 축소에 따른 임금인상 등으로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커져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인식 확산

* 재정지출 확대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경우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FT, 11.10일)

- 최근 발표된 미국의 주요 실물경제 지표들도 금리인상 가능성 뒷받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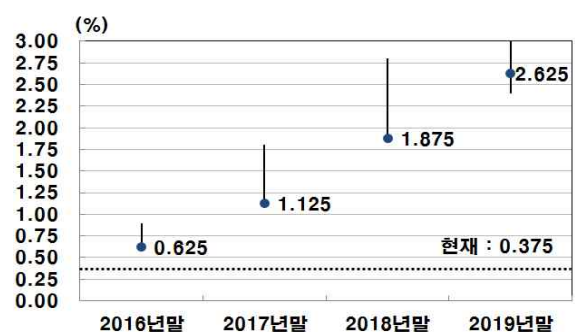
* 수입물가상승률(전월대비): ('16.9월) 0.2% → ('16.10월) 0.5%(예상치 0.4%)
 소매판매증가율(전월대비): ('16.9월) 1.0% → ('16.10월) 0.8%(예상치 0.6%)

연방기금 선물금리에 내재된 12월 금리인상 확률



자료 : 시카고상업거래소

'16.9월 FOMC 정책금리 전망¹⁾



주 : 1) 선은 중심치의 범위, 점은 중앙값
 자료 : FRED

③ 향후 고려사항

- ◆ Trump 행정부는 지지층을 위한 선거공약과 현실 사이의 3대 딜레마를 해결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마련 필요
 - 아울러,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도 Trump 당선에 따른 경제 및 금융 시장의 변화를 고려해 나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

- (경제정책 구체화) 핵심지지층 기반을 유지하면서 내각 구성 및 의회 협의, 주요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경제 현실을 반영해야할 필요성에 직면
 - (3대 딜레마의 해결) 새 행정부는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정책공약들과 경제 현실 사이에 나타나는 3대 정책 딜레마*의 해결이 필요
 - * <참고 1> 'Trump 행정부의 선거 정책공약과 현실경제의 3대 정책 딜레마'
 - (내각 인선 및 의회와의 협의) 재무부 장관 등 내각 인사의 성향, 의회와의 관계 등에 따라 향후 정책방향의 변화 예상
 - 온건 실용적인 인사가 임명될 경우 대선 공약의 합리적 수정을 통해 정책의 급진성을 완화할 가능성
 - * 현재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Bolton, Giuliani 등은 신보수주의자 성향이며, 재무·상무장관 후보로는 Mnuchin 등 월가 인사 등이 거론
 -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으로 법률안 통과가 용이할 수 있으나, 공화당 전통적 정책방향과 상이한 재정·무역정책 등의 조율이 필요
 - * 공화당이 상원 51석(전체 100석), 하원 238석(전체 435석)을 차지
 - 다만, 상원에서 공화당이 법안처리 지연행위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의석비중*인 60%에는 미달하여 급격한 정책 변화에는 한계가 있을 가능성
 - * filibuster(의사진행방해)-proof majority
 - (주요국과의 관계) 중국, 멕시코 등 주요 국가와의 경제·외교적 관계의 변화에 따라 통상정책의 범위와 폭 등도 수정될 가능성
 - * 미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거나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물린다면, 중국은 보잉사 주문 여객기를 에어버스로 바꾸고 자동차, 아이폰 등의 수입을 전면 제한하는 등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중국 환구시보, 11.14일)

<참고 1>

Trump 행정부의 선거공약과 현실경제의 3대 정책 딜레마

① “보호무역” 공약 vs “일자리 창출”

- TPP철폐 등 보호무역과 이민제한 등의 공약을 통해 백인 노동자 등 핵심지지층*의 지지를 확보

* 출구조사 결과(CNN), 백인 남성(지지율 63%) 및 저학력층(67%) 등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지역별로는 Ohio·Wisconsin 등 중·서부 공업지역(Rust belt)에서 우위

- 반면, 보호무역과 이민제한 등은 교역 둔화 및 노동공급 감소 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성장에 부정적 효과

* 보호무역의 경제적 효과: 중국과 멕시코에 대한 관세인상 등으로 수입품 소비 및 기업투자가 감소하면서 미국의 연간 성장률이 0.5%p 하락(Barclays, '16.11월)

** 이민제한의 경제적 효과: 불법이민자 추방 및 이민유입 감소에 따른 노동력 축소로 미국의 장기평균 취업자수 증가율이 0.5~0.7%p 하락(Moody's, '16.6월)

② “전통산업” 중시 공약 vs “미래 성장동력 확충”

-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화석연료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등 전통적 에너지 산업을 지원하고, 도로·교량 등 전통적 사회간접자본 건설 투자

- 반면,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IT 등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공약이 없는 등 중·장기 혁신동력이 약화될 우려

* 실리콘밸리의 주요 IT기업들은 새 행정부의 산업·무역·이민 정책 등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DowJones 기술주 주가는 Trump 당선 이후 11.14일 기준 2.5% 하락)

③ “확장적 재정정책” 공약 vs “재정건전성”

- 1조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등 재정지출 확대와 소득세·법인세 감세 및 상속세 폐지 등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 반면, 재정수지 적자 확대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할 가능성

* 공약 이행시 재정적자 전망(Moody's, '16.6월): '15년 -2.5%(GDP대비) → '26년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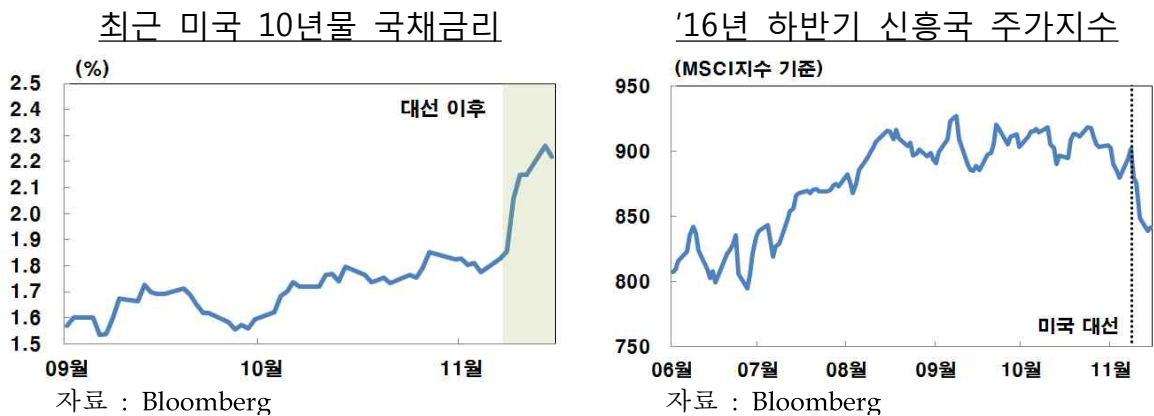
** 미국의 국가신용등급(S&P기준)은 '11년 재정적자 우려 등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AAA'에서 'AA+'로 강등된 뒤 현재까지 유지

□ (통화정책 정상화) 금리인상 시기 및 속도는 Trump 당선에 따른 경제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면서 조정될 전망

○ 미 대선 이후 미국 국채금리의 급격한 상승 및 신흥국 금융 불안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이른바 'Trump tantrum')되는 모습

- 미 달러화도 엔화, 유로화 등 주요 통화대비 강세를 보이는 상황

* 엔/달러: (11.7일)104.4 → (11.15일) 108.1, 달러/유로: (11.7일)1.104 → (11.15일)1.072



○ 그동안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과정*에서도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바 있으며, Trump 정부하에서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될 우려

- * ① '13.5월 Bernanke의장의 3차 자산매입 축소 시사 발언(연방 상·하원)
- ② '14.1월 3차 자산매입 축소 시작 ③ '14.10월 3차 자산매입 종료



○ 한편, Yellen의장의 임기 종료('18.2월), 공석중인 연준이사(2명)의 임명* 등 연준의 거버넌스 변화도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전망

* 현재 공석인 연준 FOMC 참석 이사 2명을 매파성향 인사로 임명할 가능성(FT, 11.10일)

➡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경기회복세를 유지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 등이 관건

II. 일본

- ◆ 일본은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확장적 재정정책 및 구조개혁 정책**(3개의 화살, 일명 아베노믹스) 추진중('13년~)
 - 구조개혁 성공 및 재정건전성에 대한 신뢰회복 여부가 향후 일본 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

① 완화적 통화정책

- 경제주체 기대회복을 통한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통화정책 제도변경*** ('13.1월), **양적·질적 완화정책**** 추진('13.4월) 등 과감한 통화정책 시행
 - * 물가안정목표제(소비자물가상승률 2%) 도입, 정책운용목표 변경(콜금리→본원통화)
 - ** ① 양적: 지속적인 본원통화 증대(연간 60~70조엔), '14.10월에 80조엔으로 확대
② 질적: 매입자산은 국채, 상장지수펀드, 부동산투자신탁 등의 매입한도내에서 적의 결정
- '16년에는 **마이너스금리***, 자산매입 기간에 대한 **Forward guidance*** 등 추가 **완화조치**를 시행하고, **물가목표 달성시기**를 '18년으로 연기('16.11월)
 - * 중앙은행 당좌예금의 일부에 -0.1% 금리를 결정('16.1월)
 - ** 자산매입 종료 우려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물가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완화 정책 지속 계획을 발표('16.9월)

② 확장적 재정정책

- 저성장 극복을 위해 **재정적자 기조를 유지하는 등 확장적인 재정 운용**
 - * 재정수지 적자 비율(GDP대비, %): ('13) -8.25 ('14) -5.77 ('15) -4.84 ('16) -4.86
- '13~15년까지 총 18.9조엔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경기회복 지원
 - * 노후인프라 개선·동일본대지진 복구 및 자연재해 예방 강화 등을 위한 긴급경제대책 ('13.1월), 지방으로 선순환 확대를 위한 긴급경제대책('14.12월) 등
- '16년에는 **28.1조엔** 규모의 **경제대책**을 수립하여 인프라 정비, 중소기업 지원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지출
- 한편, 설비투자 증가·급여인상분에 대한 **법인세 혜택** 부여('13.1월) 및 **법인세율 인하**(25.5% → 23.9%) **계획** 발표('14년) 등 기업의 투자여력 제고

③ 구조개혁 정책

- (산업개혁) 신성장산업 육성 및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기업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공급과잉업종 구조조정 추진
 - (성장동력 확충)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망산업 육성 및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전략 제시
 - 유망산업 발굴 및 R&D지원 등의 「민관전략프로젝트*」 발표('16.5월)
 - * 스마트사회(자율주행·스마트공장·핀테크·드론택배), 의료업(환자별 추적의학), 에너지업(친환경차), 관광업(전문인력), 스포츠업(생활체육·올림픽), 부동산업(자산가치평가시스템) 등
 - 노동집약적 5대 산업*의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R&D지원, 법·제도 정비 등 **로봇공학 육성** 정책 추진(「로봇新전략」, '15.1월)
 - * 제조업 조립, 물류·소매·숙박업, 간호, 건설업, 농수산업 등
 - (기업투자환경 조성) 규제 개선 및 지역별 국가전략특구 설정을 통해 기업의 신규투자 지원
 - 기업이 신규사업 추진시 규제대상 여부를 사전에 조회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직접 예외조치 요청(「그레이존 해소·기업실증특례」, '13년)
 - 지역별로 중점추진 분야*를 선정하여 맞춤형 규제특례·세제혜택 등 제공(「국가전략특구법」, '13년)
 - * 도쿄(국제비즈니스·도시재정비), 간사이(국제의료), 니카타·야부(농업개혁), 오키나와(관광) 등
 - (기업 구조조정) 과잉설비 기업의 자발적으로 사업재편 추진시 세제·금융 및 규제특례를 지원하여 구조조정 활성화 유도(「산업경쟁력강화법」)
 - * 미쓰비시중공업, 히다치제작소는 화력발전부문 분리 → 미쓰비시·히다치 파워시스템 설립('15.1월)
- (노동개혁) 정규직 고용보호 수준을 완화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정책 추진
 -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정규직의 금전보상부퇴직을 허용('15년 제안)하여 정규직 고용의 유연성 제고

○ (고용의 질 개선)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자 처우 개선 지원

* '11년 737엔 → '12년 749엔 → '13년 764엔 → '14년 780엔 → '15년 798엔 → '16년 822엔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한정 정규직*을 도입

* '비정규직 업무(한정된 근로범위·시간·지역) + 정규직 안정성(무기계약·급여수준)' 형태로 노동계약법 개정(5년 이상 근무 비정규직 무기고용 전환 의무화)으로 한정정규직 채용 확대

- 아울러 파견직의 계약갱신 불안 및 저임금 노동 완화*

* 파견회사 소속 무기계약 직원의 경우 사용업체와의 무기한 파견계약을 허용하고, 사용업체의 동일업무 정규직 수준의 임금 지급 의무화('15년)

4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및 노인빈곤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 연금·의료·양육보험 등 관련 재원은 소비세 인상(5% → 10%)을 통해 확보

○ (저출산 대응) 합계출산율 향상(1.4명 → 1.8명)을 목표로 전담부처(1억 총활약상, 장관급)를 신설하고, 출산·육아에 대한 지원 강화

- 결혼·육아·교육비용에 대한 세제혜택·금전지원* 및 보육환경 개선**

* 결혼·육아·교육 목적 증여에 비과세, 셋째 이상 자녀의 보육기관 사용 우대 및 비용 무상화 등(「소자화(少子化) 사회 대책」, '15.3월)

** ① 보육교사 급여 인상, 방과후 아동클럽 수용규모 확대(「1억 총활약사회 대책」, '15.9월) ② 여성의 탄력근무기간(1개월) 연장 추진

○ (노인빈곤 방지) 고령자 소득보장 확대를 위해 연금제도 개선

- 후생연금 최소가입기간을 단축(25년 → 10년, '17.4월 적용)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후생연금 가입 허용('16.10월) 등 보장대상 확대

5 향후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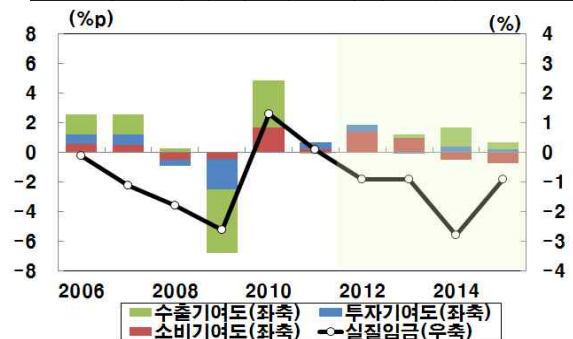
- 아베내각의 경제정책은 시행초기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냈으나, 최근에는 성장세가 미약한 상황
 - 초기에는 엔화가치 약세, 소비심리 호전 등으로 디플레이션이 완화
 - 그러나 '14년 이후 소비세율 인상, 글로벌 수요 축소 등으로 성장세가 다시 부진하고, 저유가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도 낮아지는 추세
 - 실질임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민간소비의 GDP기여도가 축소

일본의 GDP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자료 : OECD

일본의 소비·투자¹⁾·수출기여도 및 실질임금



주 : 1) 비거주용 고정자산투자 기준
자료 : 일본 내각부, 후생노동성

- 향후 일본 경제의 성패는 구조개혁의 성공 및 재정건전성에 대한 신뢰회복 여부에 좌우될 전망이다
 - 산업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개혁 등 중장기 구조개혁의 순조로운 추진 여부가 향후 일본경제의 디플레이션 탈출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 * 경제성장 및 디플레 탈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구조개혁 필요(IMF, '16.8월)
 - 한편 아베내각에 대한 높은 지지율(62%, '16.9월)은 과감한 구조개혁 추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
 -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도 일본 경제 신뢰회복에 관건
 - * 국가채무비율(GDP대비, %): ('07)183.0 ('09)210.3 ('11)231.6 ('13)244.5 ('15)248.0
 - 실효성 있는 재정건전화 대책*이 없을 경우 국가신용도 하락**에 따른 금리 상승 및 재정악화 가속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상존
 - * 점진적 소비세율 인상, 과세기반 확충, 사회보장체계 개편 등 재정건전화 대책 필요(IMF, '16.8월)
 - ** 소비세 인상 지연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Moody's, '16.6월)

Ⅲ.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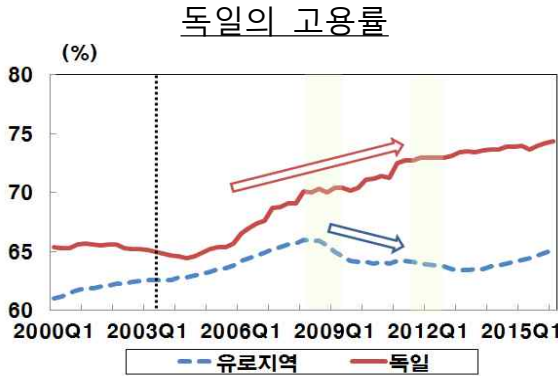
- ◆ 독일은 Industry 4.0을 통해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가운데 보육부담 완화 및 저소득층 빈곤탈출 지원 등 사회·노동개혁 추진
 - 한편 브렉시트와 재정·이민정책을 둘러싼 논란 등 EU결속력 약화 이슈의 향후 진행방향이 독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

① 미래산업 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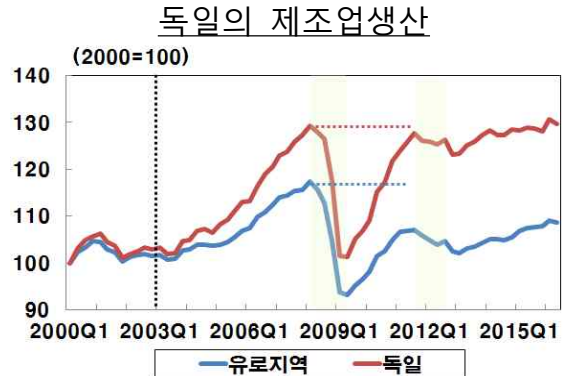
- IT기술과 기계산업을 융합하여 제조업의 자동생산체계를 구축(스마트공장)하는 「Industry 4.0*」 추진('11년~)
 - 제품 생산 및 판매에 걸친 모든 과정(설계·디자인 → 생산 → 수요·재고관리)을 제어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마련하여 공급망 최적화 구현
 - 고객맞춤형 설계·디자인(3D 프린팅), 생산속도·불량률 개선(인공지능), 수요·재고관리(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으로 제조업 생산성 제고
 - 독일 정부는 스마트공장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R&D 예산 지원, 플랫폼 표준화 및 인력 양성 등 지원
 - 스마트공장 시스템 기술개발에 R&D 예산 지원(연간 2억 유로, '12~15년)
 - 다양한 생산단계간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플랫폼의 표준화 구축 및 사이버보안 강화 지원
 - 융복합기술 전문가 과정을 신설하는 등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 한편, 스마트공장 보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당초 기업 중심에서 민·관 공동 추진으로 개선('14년)
 - Industry 4.0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부족 및 확산 저조에 대응하여 민·관·학이 공동 참여하는 'Platform Industry 4.0' 구성
 -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Industry 4.0 대응 IT 투자에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기술·노하우 보유 전문가 파견 등 지원

② 사회·노동개혁 추진

- (노동개혁 성과와 한계) 노동개혁 추진('03년) 결과, 독일은 양호한 고용 및 제조업생산 지표를 보였으나 취약계층 고용의 질 저하 등의 한계가 부각
- '08년 이후 독일의 고용률은 유로지역 여타국과 달리 지속적 개선되었고, 제조업생산도 인적 경쟁력 보존(Labor hoarding) 등으로 빠르게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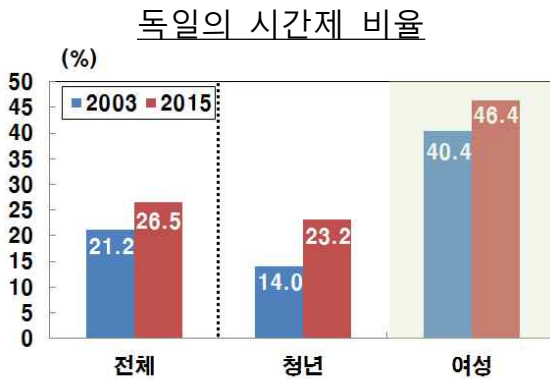
자료 : EU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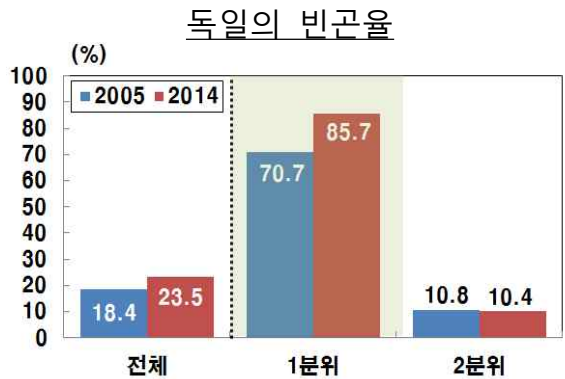
자료 : EU통계청

- 다만 여성 등 취약계층의 시간제고용 비율이 증가하였고, 저소득층의 빈곤률*이 확대되면서 사회양극화 문제 대두

*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60%미만, EU기준상 기본적인 삶(주택임대, 난방, 전기사용, 교통, 여가 등의 측면)을 영위하지 못하는 이들의 확률



자료 : EU통계청



자료 : EU통계청

- (사회·노동개혁 추진) 여성 저임금 시간제 고용비율을 낮추고, 저소득층의 빈곤탈출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 사회통합 강화
- 기혼여성 전일제 복귀의 핵심장애요인인 보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육소 확충 등 전일제 보육서비스 제공 및 금전적 지원** 등 추진
- * 독일 여성의 40% 이상이 보육부담으로 시간제에 종사(European Commission, '16년)
- ** 맞벌이 부부가 교대로 육아휴직시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 2개월 연장 등 남성의 육아참여 유도
- 최저임금 법적 도입('15년), 저소득층 사회보장수당 및 실업자 구직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빈곤율 개선

③ 향후 고려사항

- 브렉시트, 재정 및 이민정책 등 EU의 결속력에 영향을 주는 이슈에 대한 원만한 합의점 도출 여부가 향후 독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
 - ① (브렉시트) 영국의 EU탈퇴 결정('16.6월)으로 EU분열 움직임이 부상하고,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우려
 - 영국의 EU탈퇴 협상이 **Hard Brexit***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협상과정에서 **독일 및 EU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
 - * 영국이 완전한 이민자 통제권 등을 보유하는 대신 EU 단일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제한
 - ** 영국정부는 이민자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EU 및 회원국들은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지 않으면 영국의 EU단일시장 접근을 제한하겠다는 입장
 - ② (재정정책) 독일의 재정건전성 우선정책과 EU 여타국의 신축적 재정 정책 추진 필요성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EU 결속력 약화 우려
 - EU는 **스페인·포르투갈이 재정건전화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결론지었으나, EU분열 우려를 감안하여 **제재 유보**(포르투갈은 '16년, 스페인은 '18년까지 충족 조건)
 - * 재정적자는 GDP대비 3% 이내를 유지해야하며, 위반시 GDP 0.2%내의 벌금 부과 가능
 - **이탈리아는** 부실은행 공적자금 지원의 전제조건인 **채권자**(주주·예금주 등) 우선 손실부담(8%) 원칙에 대한 **예외를 요청**하였으나, EU는 반대 입장
 - ③ (이민정책) 독일 정부는 포용적 난민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독일 국민 및 EU 여타국의 반대를 설득하지 못할 경우 **갈등이 심화될** 우려
 - 이민자 유입에 따른 저숙련·저임금층의 반발 등으로 **영국이 EU탈퇴를** 결정한 가운데 **프랑스 및 독일 테러 발생으로 반이민정서가** 확산
- 한편 내년 8월 예정되어 있는 독일 의회총선거 결과에 따라 이민정책 등 현 메르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지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
 - 이민정책에 대한 높은 반대여론* 감안시 내년 의회총선거 결과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독일 경제에도 리스크도 가중될 가능성
 - * 메르켈 총리의 난민정책에 대해 국민의 82%가 반대(슈피겔紙 여론조사, '16.9월)
 - * 독일 주의회 선거('16.9월)에서 반난민정책을 추구하는 극우파 정당의 지지율 상승

IV. 중 국

- ◆ 중국은 공급측 개혁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중대 대책으로 안정적 수요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경제구조 개편 추진중
 - 리스크 요인(부동산시장, 구조조정 및 기업부채)에 대한 관리 성패가 향후 중국경제 연착륙 여부에 관건이 될 전망

①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급측 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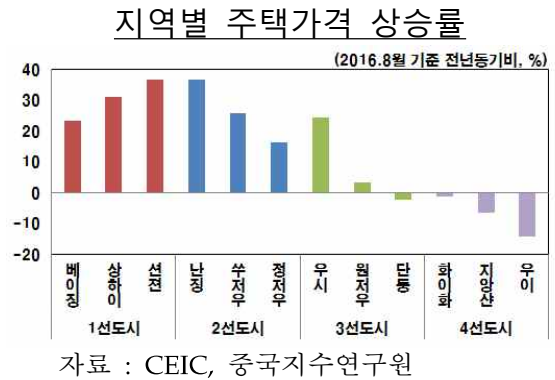
- 제조업, 서비스업을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개편하고, 자금조달여건 개선, 기업비용 경감 등으로 기업 경영환경 제고
 - 제조업(「제조업 2025」, '15년) 및 서비스업(「서비스업 발전 계획」, '12년)의 고도화를 위한 종합전략 추진
 - * 제조'강'국 도약('15~25년 : 기반 확충, '26~35년 : 중위권 도약, '36~45년 : 선도국 지위)을 목표로 IT, 기계, 항공우주, 해양, 철도 등 10대 산업 육성
 - ** 생산성 지원(금융, 교통, 물류, 과학기술 등) 및 생활수준 제고(문화, 여행, 의료, 부동산, 양로 등)를 위한 서비스업 육성
 - 아울러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 정책* 및 민간의 혁신아이디어 시장화** 촉진 정책 병행('15년~'16년)
 - * ① 「빅데이터산업 발전 촉진안」, 「로봇산업발전안」: 네트워크·정보의 활용도, 로봇공학 기술력 제고, ② 「인터넷+」: 인터넷과 기존 산업을 융합한 새로운 경제생태계 창조
 - ** 「대중창업·만중창신」: 창업비용 지원, 창업 행정절차 간소화, 벤처금융 활성화 등
 - 국가가 관리하던 예대금리를 자유화*하여 대출금리 부담을 축소하고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해 직접적 자금조달여건도 제고
 - * '13.7월 대출금리 하한선 폐지, '15.11월 예금금리 상한선 폐지
 - 후강통* 등 외국인 주식투자를 허용하고 양로보험의 주식매입 한도 확대
 - * 홍콩거래소를 통한 홍콩·외국인 개인투자자의 상하이거래소 주식 매입 허용('14.11월)
 - 상대적으로 높은 영업세 부담을 경감('16.5월)하고 국유기업 가격자유화를 통해 전기 등 에너지비용 하락 유도('16.1월)

② 안정적 수요기반 확보를 위한 소비증대 대책

- (소비여력 제고) 가계의 가처분소득 및 구매력을 증대하고 핵심소비층인 중산층 기반 강화
 - 최저임금을 인상('11~'15년 연평균 13%)하는 가운데 단체협약제도를 강화('11년)하여 노동자의 임금협상력을 제고하고 가처분소득 증대 유도
 - 소비자금융회사*를 설립('10년)하여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고, 저소득층 대상 저가주택 공급 등으로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가계구매력 제고
 - * 대형은행 전문자회사 형태로 중국은행·베이징은행·청두은행부터 시범 설립한 이후 전국적 확대
 - 농민공(농촌출신 도시거주 無호적자)의 시민자격 취득을 허용('13년)하여 도시의 취업·교육·사회보장체계에 공식 편입시켜 중산층 기반 강화
- (소비계약 완화) 고령화, 소득불균형 등 소비계약 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도 병행
 - 한자녀 산아제한책인 「계획생육」을 완화하여 조건 없이 두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허용*
 - * '13.11월 예외적 허용, '15.10월 전면 완화
 - 5대 보험* 가입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 강화(샤오캉 사회 건설**)
 - * 양로(연금)·의료·실업·공상(산업재해)·생육(출산육아)보험 법제화(「사회보험법」, '11년)
 - ** 모든 인민이 풍족하고 안정적인 사회를 의미하며 '2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3천~1만달러를 목표로 제시
 - 농민공, 청년층이 도시거주 기간에도 농촌 양로·의료보험의 수급자격 유지
 - 도농 양로보험 일원화('14년)를 통해 농촌의 수급수준을 도시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최저생계보장금액 수혜수준 인상('14년)

3 향후 고려사항

- (부동산시장) '15년 하반기 이후 정부의 유동성 확대 및 규제 완화 정책으로 주택가격이 1·2선 도시를 중심으로 급등
 - 최근 중국정부는 1·2선 도시는 규제 강화*, 3·4선 도시는 적절한 부양책 실시**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대책 실시중
 - * 선급금 비율 상향조정, 대출요건 강화 등 / ** 취득세 인하, 대출요건 완화 등
 - 중국 부동산시장의 양면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대도시의 부동산시장 안정에 주력하면서 경기상황 등을 고려한 탄력적 정책대응이 예상



<참고 2>

중국 부동산시장의 양면성과 정책 딜레마

-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정책 대응을 어렵게 하는 양면적 특징이 존재
 - (시장 안정화 필요성) 대도시 중심의 부동산가격 급등을 막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여 빈부격차 완화 등 사회안정 추구 필요
 - (시장 활성화 필요성) 경제성장* 및 지방정부 재정 고려시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인 부양 필요성도 존재
 - * 주택 및 관련 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10년 28.3%에 달했으며, 이후 점차 하락하였으나 '15년에도 15.9%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IMF, '15.11월)
 - 특히 '토지사용권* 판매수입'은 지방정부 재정수입의 18.5%('15년 기준)를 차지하는 등 부동산시장 활황은 지방정부 재정수지와 직결
 - * 일정기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지방정부가 경매 방식을 통해 부동산개발업자들에게 판매
- ⇒ 이에 따라 빈부격차 완화 등 부동산시장 안정 추구 필요성과 경제성장 및 지방정부 재정수입 확대를 위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필요성간 정책 딜레마 발생

□ (기업 구조조정) 철강·석탄 등 공급과잉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실업, 지역간 격차 확대 등 경제·사회적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

- 공급과잉 산업내 적자기업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이며,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구조조정시 지역경제에 큰 부담 우려
- 정부는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할 대규모 실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구조조정 전용펀드를 통한 직업훈련, 이직지원 등 실업대책 마련('16.4월)

대표적 공급과잉산업의 적자기업비중(%)



자료 : CEIC

공급과잉산업의 지역적 분포



자료 : 언론보도 등 종합

□ (기업부채) 최근 중국의 기업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 및 정부부문으로의 신용리스크 전이 가능성이 제기

- 중국의 기업부채 비율은 169.1%(GDP대비, '16.3월)로 금융위기 이후 주요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07년말대비 +71.5%p)

* '07년말대비 기업부채 증가 규모(%p, '16.3월): 미국 1.9, 일본 0.5, 유로 10.8, 한국 14.3

- 정부는 기업의 부채비율을 축소하고 은행의 부실채권 매각을 원활화하기 위해 디레버리징 정책* 발표

* 기업 부채비율 축소('16.3월) : 건전대출에 대한 출자(주식)전환(1조위안 한도) 시범허용, 은행 부실채권 매각('16.2월) : 부실자산 유동화증권 발행(500억위안 한도) 허용

- 기업부채 급증은 경기진작용 정부투자 확대, 기업수익성 저하, 주식·회사채 발행여건 미성숙 등 구조적 원인에 기인하여 단기간에 해소되긴 어려울 전망

- 다만 낮은 외채 수준*, 정부 영향력이 큰 금융산업 구조 및 양호한 재정건전성** 등 감안시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

* GDP대비 총외채 비율(% , '15년말): 중국 12.9 미국 98.7, 일본 71.4, 유로 122.3

**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 , '16.3월, BIS): 중국 45.2, 미국 97.4, 일본 211.5, 유로 91.6

《참고자료》

- 권오은, “중국의 레버리지 축소 정책 추진 현황 및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5월
- 김규판·이형근·이신애, “저성장시대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10월
- 김인구, “EU 은행동맹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한국은행*, 2013.8월
- 박복영 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미국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12월
- 우신욱·정준우, “위기이후 주요국의 효율적 재정운용 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행*, 2015.8월
- 이장규 외, “중국의 소비주도형 성장전략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12월
- 이재원, “제4차 산업혁명 : 주요국의 대응현황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2016.8월
- 이재호·정준우, “주요국의 노동시장 개혁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행*, 2015.7월
- 조성혜,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과 시사점 - 일하는 빈곤층을 중심으로”, *비교노동법논총*, 2013.12월
- 조인우,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 흐름과 시사점”, *한국은행*, 2016.9월
- 황경진, “중국 단체협약제도 실질화의 최근 동향”, *한국노동연구원*, 2011.4월
- 황해봉, “독일의 이민법 제정”, *법제처*, 2004.7월
- European Commission, “Country Report Germany 2016”,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2016.2월
-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 “National Reform Programme 2015”, 2015.5월
- F.Fall·M.Pisu·J.KPareliussen·B.Bloch, “Vulnerability of Social Institutions”, *OECD*, 2014.6월
- IMF, “Fiscal Monitor - Acting Now, Acting Together”, *World Economic and Financial Surveys*, 2016.4월
- K.Inaba·R.O'Farrell·A.K.Christensen, “The Conduct of Monetary Policy in the Future”, *OECD*, 2015.3월
- M.Kruger·K.Mo·B.Sawatzky, “The Evolution of the Chinese Housing Market and Its Impact on Base Metal Prices”, *Bank of Canada*, 2016.3월
- OECD, “Economic Policy Reforms 2016”, *Going for Growth Interim report*, 2016년